

'폐기물 발전소' 전주시 뒤늦은 반대

만성지구 인근 위치해 주민 거센 반발... 시, 지난해 허가 심의 과정서 '하루 만에 사실상 동의'

전주시 팔복동 일대에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전주시가 뒤늦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눈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대규모 주택단지인 만성지구 인근이어서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분진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외대의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까지 2,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동참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팔복동 발전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없는 조건'

로 단 하루 만에 사실상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전주친환경철단복합 일반산업단지 및 전주 제2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2곳의 자원순환시설 업체는 최근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전기공급설비) 신청을 지난 7월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종전의 폐기물 소각 용량을 확대,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으로 발생하는 스팀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폐기물 고형연료란 폐타이어나 생활쓰레기 중에서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1일 9,900KW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B업체도 1일 생산량 2,650KW 발전 용량으로 지난해 1월 전북도에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가 전기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발전시설을 설치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부결될 경우 업체가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발전시설은 환경은 물론 주민들에

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만성지구 입주 예정자 한모(27·여)씨는 "최근 전주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이라서 아이를 키우기에 악조건"이라면서 "그런데도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다른 입주 예정자 오모(53)씨는 "분양가가 비싼데다 고심 끝에 입주할 결심했는데 불과 입주가 몇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 화가 난다"라며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충남 부여군에서는 6차례가 넘는 주민 설명회 끝에 반대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는데 전주시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민근 기자



25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회 A위원장은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리사이클링타운 주민 갈등 '점입가경'

주민지원금 지급 기준 놓고 고소·고발 전 벌어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금금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전주시는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 대표적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립하는 대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연간 6억원을 지원한다.

25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회 A위원장은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위원장과 같은 협의회 주민 B씨는 그동안 불쌍사나운 분쟁을 벌여 왔다.

B씨는 올해 들어 A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해당 고발과 소송은 각각 무혐의 처분과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또 최근 A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A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2,5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기

소의견 이유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전주시(지급대상) 시행규칙대로라면 지난 2014년 5월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음식물쓰레기 냄새 피해를 과거 주민만 입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리사이클링타운 설치계획공고 이후 이사 온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A위원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지원금액은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약속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체 정관을 개정했고, 정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주민 간 갈등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A위원장이 제출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시행규칙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주민 간 고소고발 등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정당국도 담당하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친환경 탄소필터 선도기업 전주에 '등지'

시, (주)씨아이디지털과 투자협약 체결... 20억원 투자해 60여명 고용 창출키로

전주시 주력산업인 탄소섬유를 활용해 친환경 탄소필터를 제작하는 업체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1번지인 전주에 등지를 틔웠다.

전주시는 25일 팔복동 산업단지 BYC 건물 1층 현지 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이종수 (주)씨아이디지털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탄소필터 제조업체인 (주)씨아이디지털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씨아이디지털은 이날 협약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총 20억원을 투자해 3,305㎡(1,000평) 규모의 전주공장을 신설하고, 약 60여명을 고용키로 약속했다.

이 업체는 탄소소재 국가산업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팔복동 산업단지 BYC공장을 임대해 공장을 운영한 후 탄소국가산업단 조성에 맞춰 이전할 예정이다.

시와 시의회는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와 공장등록 등 인·허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탄소섬유를 활용해 친환경 탄소필터를 제작하는 업체가 탄소인프라가 풍부한 전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먹거리인 전주의 탄소융합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 업체가 연간 급여액 15억원

이상, 원·부자재의 매입 등 6억원 이상, 매출규모도 연간 약 30억원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매출 증가에 따라 고용인원의 증가와 투자설비의 도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나서서 찾아 도와드릴 것"이라면서 "기업을 전주에서 하기를 잘 했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독일처럼 강력한 중소기업들을 키워내는 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싶다"라며 "지역과 기업, 청년이 함께 도전하고 성장한다면 얼마든지 히든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 진북파출소 보이스포싱 예방활동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는 최근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 진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A(75)씨가 금융감독원 및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집을 비운 사이 현금을 도난당한 절도형 보이스포싱 피해 사례가 발생해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금융기관 및 경로당, 아파트를 방문해 홍보방송과 예방 홍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했다. 또한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고액의 현금 인출 시 핫라인을 이용한 신고출동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야간 창문침입 금품 훔친 30대

야간에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B(48)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7월부터 전주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음식점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이상민 기자

서해안 고속도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대형차량의 대열운행, 차내음 추가무, 지정차로위반 등의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안전진단, 홍보,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북경찰청 관할 내 가을철 월평균 교통사고가 29.5명으로 평월 대비 13.5% 증가하고, 대형버스사고도 월평균 7.6건으로 월평균 6.1건에 비해 1.2배 높아 이를 예

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가을에는 10일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전년대비 7.4% 일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궁 화 태 고순대장은 "법규위반 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선정... 도서구입비 지원

전주시가 이용률이 높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선정해 도서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주지역 67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사립작은도서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21개월 동안의 대출권수와 독서프로그램, 홍보실적 등 운영실적 11개 분야 28개 항목이다.

시는 평가를 통해 15개 작은도서관을 선정, 총 5,0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방을 위해 힘써온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도서관에는 가점

을 부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분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증거자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대상 도서관을 아파트와 교회, 법인단체, 개인 등 운영 주체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 상대평가를 진행, 평가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